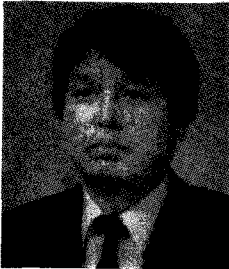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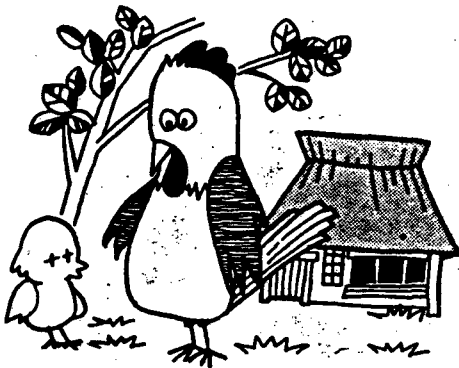


우리실정에

맞는 계열화 체계는?



김 정 주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계열화의 관심이 '80년대 중반이후 고조되면서 '93년 5월 현재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계열화 사업...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1. 머리말

한국의 GATT BOP조항 졸업과 『우르과이 라운드』협상결과에 따라 각종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축산업은 그 존망이 매우 위태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육계산업은 생산성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 타산업과의 경쟁은 물론 수입개방에 의한 외국인 육계 생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육계산업은 초생추의 수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종란의 생산과 부화, 사료 및 가축약품의 공급, 육계의 사육, 도계, 계육의 가공,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독자적 개별경영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경영비가 중복 지출되며 이윤 중심점도 중첩될 뿐 아니라 경영체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여 생산비는 증가하고 품질은 균일하지 못하여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

격진폭이 심하다.

그런데 현재의 생산기술 수준하에서는 생산력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축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계열화 체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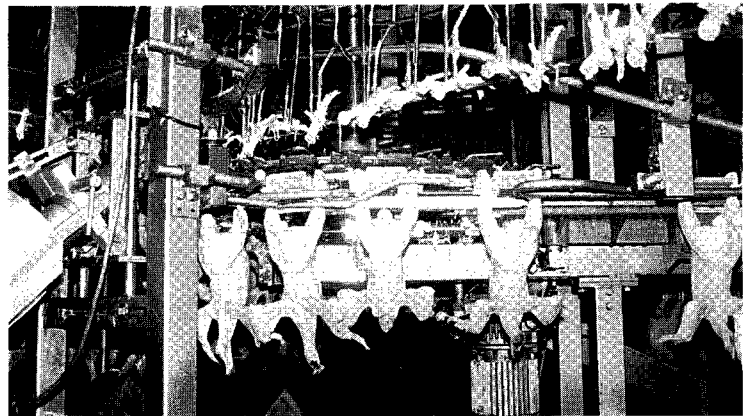
경영 일반이론에 의하면 생산에로의 진입과 퇴진이 용이하고 생산과정이 짧아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생산과 유통을 통합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경영 통합 형태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대별되는데 수직적 통합은 경영의 각부문이 계열주체에 소유되어 종속의 관계로 통합되고 수평적 통합은 경영부문

의 각자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통합하는 형태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영의 통합방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계열주체가 주요 생산자재만 공급해주면 생산과 판매는 생산주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이다. 농용자재를 전담하여 공급하는 협동조합의 경제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통합형태는 생산자재의 공급은 물론 그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안정적이며 경영에 따른 위험이나 이익이 모두 생산주체에게 귀속된다.

둘째는 계열주체가 생산요소를 약정된 가격으로 생산주체에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생산물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계열주체가 구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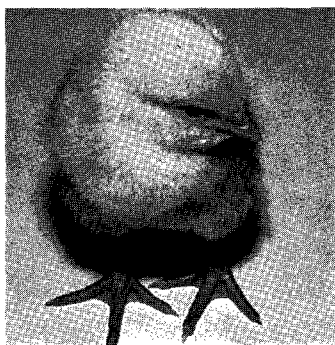


주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맥주맥의 계약재배사업이나 협동조합의 구매사업과 대취 판매 사업을 결합시킨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형태는 생산주체가 경영을 주도하면서도 경영에 수반된 위험부담을 계열주체와 분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요소나 생산물의 구매및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가격의 진폭이 심한 생산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세째는 계열주체가 일체의 생산자재를 생산 주체에게 조달해 주고(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맡김) 사육기술에 따른 기술지도 뿐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를 계열주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형태이다. 현재 한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육계의 계열화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형태는 모든 경영에 따른 위험을 계열주체가 부담함으로써 생산주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능률급제를 도입 함으로써 노력의 대가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어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주체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생산주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외소해져 생산주체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 같은 인상을 줄뿐 아니라 생산 보수의 지급 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를 정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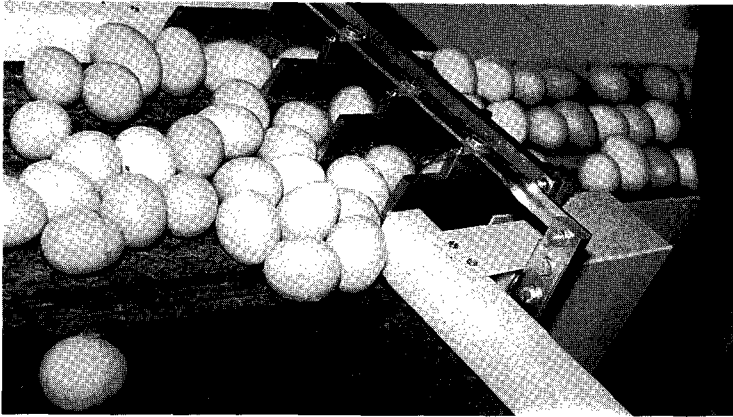
이러한 계열화 체계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나 제품의 규격화와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나아가서 생산 조절을 통한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의 진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의 경영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가 육계의 계열화 체계이다. 육계의 수직적 통합 체계는 농업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과 공업으로 대표되는 2차산업 그리고 상업으로 대표되는 3차산업이 하나의 경영체 관리하에서 상호 연관되

어 있다. 이때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생산을 대표할 만큼 중요하므로 농업생산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업생산자를 생산주체라 명명하고 있다.

3. 계열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한국에서 계열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부터이나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농축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불어 수입개방 압력을 받게 되자 농축산물 유통근대화화 경영 합리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직적 통합체계의 적용이 점차 늘어나 이 체계에 의한 육계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 5월 현재 50%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의 1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룩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1985년 부터 닭 계열화사업 촉진책의 일환으로 1988년까지 9개월 계열주체를 대상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조절기반 확충에 기본목표를 두고 21억 7천 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한도를 도모하



는 등 통합추진을 지원해 왔다. 1991년에는 용자한도를 25억원으로, 1992년에는 용자한도를 25억원으로, 1992년에는 그 용자한도를 다시 35억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10개업체로 확대했는가 하면 1993년에도 1992년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열화 사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첫째로 계열화 체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 말한 세번째 유형, 즉 모든 생산자재를 기업이 공급하고 농가는 생산만 전담하며 약정된 사육보수를 받는 유형으로 고정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계열화 체계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GP농장, 판매장, 더 나아가서 레스토랑까지를 기업이 모두 소유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수직적 계열화 체계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농림수산부 공고 제 91-29호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이 공고에는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와 의 계약에 의하여 원자재(어린기축, 사료, 약품 등)를 공급하여 생산된 기축을 자체에서 처리, 가공 및 판매를 전담하고 계약농가에 사육수수료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개의 기업이 모든 기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다 보면 과잉 투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 되어 오히려 생산비가 높아 질 수 있어서 계열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직적 경영 통합

뿐 아니라 몇개의 기능을 수평적을 통합시킨 계열화 사업도 운영의 묘를 살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규정의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육계 계열화는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주도 계열화 사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가 계열주체에 예측되는 것 처럼 되어 마치 봉건시대의 소작제도가 부활된 것처럼 느껴 지는 생산농민의 위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실제로 필자가 육계계열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990년 8월에 실시한 의향 조사에서 응답자의 31.7%가 계열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느낌에서 『완전히 예측되거나 위촉된 감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나 농업관련기관 및 농민 단체가 계열화 사업의 계약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계열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세계개선,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 자금의 장기처리 용자등 사육농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계열화 사업은 생산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동안 축산업자들의 노력으로 도입된 육계 계열화 사업은 단기간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농업의 신화』를 이루었다고 까지 극찬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8~9월 육계 생체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사이버 계열추체가 속출하자 전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평소 육계 계열화 사업에 다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양계인은 마치 계열화 사업이 가격 폭락과 사이버 계열추체의 활동에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육계 계열화 사업의 그동안 공과는 고사하고 육계 계열화 사업을 송두리채 부정하려 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육계 계열화 업체가 늘어나면서 농가와와의 사육계약이 많아져, 결국 공급측면의 증가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육계가격 폭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며 더우기 계열추체들이 사육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것 저것 따지는 기존의 사육농가 보다는 신규

참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므로 육계생산의 공급 증가요인으로 계열화 사업의 시행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그것이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처럼 지엽적이고도 과도기적인 현상을 놓고 전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넷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열화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지대하여 1993년에는 10개 계열추체를 대상으로 주체당 35억원의 자금을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융자해 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목적은 계열추체인 기업이 우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결국 그 혜택이 사육농민에게 돌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이러한 자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결국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짐으로써 만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지원된 자금을 대한용자가 종계장, 부화장, 가공판매장 등의 시설에만 투자하

도록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2년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모처럼 어렵게 지원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악성 부동산 투기나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할지 모르나 일단 채권이 확보된 이상 자금용도의 폭과 사업시행 기간을 다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업에서는 8%이나 협동조합에게는 5%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들의 자생적 단체는 비록 협동조합 형태가 아니더라도 협동조합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계열화 체계의 문제는 이에 대한 인식의 고정화에서부터 출발된 듯하다. 따라서 계열화 체계의 다양한 형태와 광범위한 효과를 인식하는 일 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계열화 체계의 방향은 사육농민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